



미국 :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 계획을 당면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한 지역 간 디지털 정보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욕 타임스 기사는 도시와 시골 간에 인터넷 속도가 큰 폭으로 차이 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에 따른 경제 성장의 저해 및 고용문제를 다루고 있다.¹⁾ 특히 팬데믹 기간에 많은 업무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온라인망의 수요가 높아졌지만, 약 4,200만 명의 미국인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시골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여러 비판에 직면했음에도, 광대역 인터넷망에 1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만큼은 여야를 막론하고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이 기사는 아이오와주 마리온(Marion) 카운티의 사례를 들며 디지털 정보 격차가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고용주가 젊은 인력을 수급·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팬데믹은 이러한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냈는데, 비대면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 지역의 노동자 다수는 인터넷 문제로 인해 재택근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때문에 시골지역의 일부 기업은 시간당 고임금을 내걸었지만 인력 채용에 문제를 겪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애디 토머(Adie Tomer)는 “민간부분이 이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시골지역의 경우 수요가 적고 분산된 탓에 비용 대비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낮아 민간기업의 인프라 개선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대적인 인터넷 설비 투자 계획은 반가운 지점이다. 과연 이 계획이 고질적인 지역 간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1) The New York Times(2021.5.17), “Rural Areas are Looking for Workers. They Need Broadband to Get Them”, <https://www.nytimes.com/> (검색일 : 2021.5.24).

미국 : 2021년 4월 신규 일자리 수 기대치에 밀돌아

2021년 4월 동안 미국 내 신규 일자리가 26만 6천 개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¹⁾ 이는 3월의 77만 개 신규 일자리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이며, 특히 백신 보급 및 바이러스 감염 감소 등 팬데믹 관

련 호재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제학자들의 예상치를 훨씬 밀돈다. 팬데믹 시작 후 2개월 만에 2,200만여 개의 일자리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이후 점차 회복 추세에 있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에



비해 800만여 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며, 현재 추세로 보면 2023년 말까지 이 일자리 공백을 메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경제 회복에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더딘 신규 일자리 수 추이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경기부양책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공화당은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으며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아칸소주, 몬타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공화당 지역에서는 실업수당 폐지 움직임이 보이고, 미국 재계와 상공회의소 역시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대해 바

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경기부양책이 미국인에게 필수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한편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몇몇 경제학자 역시 일자리 증가가 더딘 이유는 실업수당을 넘어 여러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예로 여전히 많은 학교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보육문제가 심각한 점,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다소 실망스러운 일자리 수 추이에도 불구하고 항공 및 식당, 호텔 등에서는 채용이 크게 증가했고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팬데믹 이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곳곳에서 포착된다.

1) The Washington Post(2021.5.8), "U.S. Picked Up just 266,000 Jobs in April, well below Expectations as Economy Struggles to Rebound", <https://www.washingtonpost.com/> (검색일 : 2021.5.24).

미국 : 2021년 5월 첫 주, 실업급여 청구건수는 총 47만 3천 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저 수준 기록

미국 노동부는 2021년 5월 첫 주에 미국에서 총 47만 3천 건의 실업급여 청구가 신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4월 마지막 주의 50만 7천 건보다 3만 4천 건이 줄어든 것이다. 2021년 1월에 매주 90만 건의 실업급여 청구가 신규 발생하였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건수이며, 2000년 초부터 시작된 미국 내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확산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¹⁾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국 경제가 점차 다시 활성화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 등

로 인하여 많은 기업이 사업을 재개하는 등 고용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 및 노동시장의 회복 추세는 5월 말~6월 초부터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6일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각종 법이나 정책에 의해 특별히 제한되지 않은 경우,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개인들은 마스크 착용 및 물리적 거리 두기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하였

다.²⁾ 이에 따라 사업체들의 운영과 경제활동이 속속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노동시장의 실업률도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1) Politico(2021.5.13), "U.S. Unemployment Claims Drop to 473,000, a New Pandemic Low", <https://www.politico.com/> (검색일: 2021.5.19).
- 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21.5.16), "When You've Been Fully Vaccinated: How to Protect Yourself and Others", <https://www.cdc.gov/> (검색일: 2021.5.19).

미국 :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4개 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지급되는 추가 실업급여 중단 시도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4개 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3월 11일에 서명한 1.9조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3차 경기부양 예산안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실업급여(주당 300 달러)를 중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¹⁾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짐 저스티스(Jim Justice) 주지사는 2021년 5월 14일 브리핑에서 일자리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저스티스 주지사는 이러한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실업급여 지급을 종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라 웨스트버지니아주는 6월 19일 자정에 맞춰 연방정부

가 지원하는 모든 코로나19 대유행 관련 실업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상된 실업급여로 인해 사람들이 다시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실업급여 인상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개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합한 좋은 일자리를 탐색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이는 미국 경제 전반과 노동시장의 궁극적인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와 같이 앞서 언급한 상반된 입장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으로 인해 인상된 실업급여가 대유행 이전의 수준으로 좀 더 빨리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1) CBS News(2021.5.24), "At least 24 Republican-led States are Ending Increased Unemployment Benefits as Governors say Businesses Need Workers", <https://www.cbsnews.com/> (검색일: 2021.5.25).



독일 : 연방통계청, 2019년 장애인 고용 현황 발표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독일의 경우에도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중순에 독일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애인 중 약 57%가 취업하여 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기간, 동일 연령대의 비장애인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약 82%인 것과 비교해 약 25%p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09년의 장애인 고용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약 52%, 비장애인은 79%였다.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비장애인의 증가율(+3%p)보다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조금 더 증가(+5%p)하긴 하였지만, 그 격차의 감소폭(-2%p)을 고려할 경우 장애인의 고용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¹⁾²⁾

2019년 통계 기준, 독일에 약 1,040만 명의 장애인(중증장애인 약 760만 명)이 거주하는 가운데, 약 490만 명이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가능인구에 해당했다.

장애인 고용은 산업분야별로 다소 큰 격차를 보였다. 장애인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분야는 (공공 및 민간) 서비스 분야로, 전체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약 31%가 이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약 25%가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분야는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된 산업분야로 평가할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보육 및 학교 교원을 비롯하여 보건·사회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약 26%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소매업, 자동차 정비, 음식·숙박업 분야의 경우에는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들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비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18%였으나,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14%에 불과하였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으로는 낮은 정규교육과정의 이수 수준이 지적되고 있다. 25세 이상 44세 미만의 장애인 중 약 16%는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의 경우 약 3.5%만이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전혀 이수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이 약 4배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15세 이상 전체 장애인 중 단지 12%의 장애인만이 대학입학자격시험인 아비투어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장애인의 경우 이 비율은 약 28%로, 장애인도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통계청의 발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진행된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코로나19 여파가 (장애인)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다음번에 진행되는 미시 인구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 연방통계청(destatis) 언론보도용 자료(2021.5.18), “57% der Menschen mit Behinderung zwischen 15 und 64 Jahren waren 2019 in den Arbeitsmarkt integriert”, <https://www.destatis.de/> (검색일: 2021.5.21).
- 2) 연방통계청(destatis)(2021), “Öffentliche Sozialleistungen Lebenslagen der behinderten Menschen Ergebnis des Mikrozensus”, <https://www.destatis.de/> (검색일: 2021.5.21).

독일 : 독일의 단체협약 적용률, 감소 추세 지속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가 매년 약 1만 6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독일 전체 노동자의 산업별 단체협약 적용률은 4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동독 및 서독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나타났는데, 구서독 지역의 경우에는 약 45%, 구동독 지역은 약 32%의 노동자가 산업별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구서독이 46%, 구동독이 34%였던 것에서 다소 감소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IAB의 수잔나 코하우트(Susanne Kohaut) 연구원은 산업별 단체협약 적용률의 감소 추세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하였다.¹⁾

기업별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다. 기업별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산업별 단체협약과는 달리 구동독 지역이 구서독 지역보다 높은 적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의 경우 구서독 지역의 기업별 단체협약 적용률은 8%, 구동독 지역은 11%로 나타났다.

어떤 형식이든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구서독 지역이 53%, 구동독 지역이 43%로 나타났다. 두 지역 간에 약 10%p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단체협약 적용률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단체협약 적용률이 특히 높게 나타난 산업분야는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서비스 분야로 적용률이 약 80% 수준에 달하였던 반면, 정보·통신 분야는 약 11%의 노동자만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단체협약 적용률이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였다.

사업장 단위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종업원위원회가 설치된 사업장의 노동자 비율은 2020년 설문 결과 구동독 지역이 36%, 구서독 지역이 40% 수준으로 약 4%p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약 10%p 수준인 단체협약 적용률의 격차보다는 작은 것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6년의 경우 종업원위원회가 설치된 사업장의 노동자 비율은 동·서 지역 간에 9%p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1)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 언론보도용 자료(2021.5.19), “Tarifbindung nimmt in Deutschland weiter ab”, <https://www.iab.de/> (검색일: 2021.5.21).



영국 : 코로나19와 브렉시트로 외국인 노동자가 떠나면서 노동력 공급 부족

2021년 5월 17일 로이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 봉쇄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음식·숙박업 및 소매업 부문을 중심으로 구인이 크게 늘고 있으나 코로나19와 브렉시트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공급이 감소하면서 노동력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

영국 정부는 2021년 4월 12일부터 음식·숙박업 및 소매업의 실외 영업을 허가했고, 5월 17일부터는 실내 영업까지 허가하는 등 봉쇄정책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인광고 검색엔진 아드주나(Adzuna)에 올라온 구인광고 건수는 호텔, 레스토랑 및 여가 분야를 중심으로 6주 전보다 18% 증가하여 5월 첫째 주 기준 98만 7,800건에 달했다. 또한 공인인력개발연구소(CIPD)가 사용자 1천여 명의 2021년 2분기 고용계획을 조사한 순고용 점수는 +27점으로 지난 2013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영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드주나는 올해

2~4월 중 영국 내 일자리에 지원한 서유럽 및 북미 출신 노동자 수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 월 25만 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임금 서비스 부문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크게 줄면서, 일부 도시에서는 일자리 수가 구직자의 20배에 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아드주나의 공동 창업자 앤드류 헌터(Andrew Hunter)는 음식·숙박업 및 소매업 부문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봉쇄정책을 계기로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게 되면서 구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더 이상은 해당 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 노동자로 메우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인인력개발연구소의 노동시장 수석 고문 게르윈 데이비스(Gerwyn Davies)도 전통적으로 EU 노동자들에게 의존해온 산업의 고용주들이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직원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¹⁾²⁾³⁾

- 1) Reuters(2021.5.17), "UK Firms Seek Staff after Lockdown but Foreign Workers Missing - Survey", <https://www.reuters.com/> (검색일: 2021.5.25).
- 2) The Guardian(2021.5.16), "UK 'Faces Labour Shortage' as Covid and Brexit Fuel Exodus of Overseas Workers", <https://www.theguardian.com/> (검색일: 2021.5.25).
- 3) CIPD(2021.5.17), "Labour Market Outlook : Spring 2021", <https://www.cipd.co.uk/> (검색일: 2021.5.25).

영국 : 노총, 투자회사에 기업 임원의 고임금 책정에 반대할 것을 요구

유나이티트(Unite), 유니슨(Unison), 프로스펙트(Prospect) 등 300만 명의 영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들이 기업 임원의 고임금 책정에 반대할 것을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60여 개의 대형 투자회사에 보냈다. 노동조합은 서한에서 2020년부터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연례보고서에 임원과 일반 직원 간의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된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서한과 함께 보낸 지침을 보면, 임원과 일반 직원 간의 임금 격차가 불합리하게 큰 경우에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임금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거나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투표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노조들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연례 주주총회 시기를 맞은 기업들에 임금 격차를 줄이라는 압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리오 틴토(Rio Tinto), 인디비어(Indivior), 폭스톤스(Foxtons) 등의 임원 임금 책정에 투자자들이 반대하였고, 영국 상장기업

중 올해 연례 주주총회에서 임금 책정을 승인받은 비율은 91.4%로 지난해(94.8%)보다 하락하였다.

한편, 서한 발송에 동참한 민간연구소 고임금센터(High Pay Centre)에 따르면, FTSE 100에 상장된 기업의 2020년 평균임금 중 임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119배 이상이었다. 노동조합들은 이 격차로 인해 영국이 고소득 국가들 중 가장 심각한 소득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임금은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및 이직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국 최대 자산관리 회사인 리갈 앤 제너럴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Legal &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 : LGIM)와 피델리티 인터내셔널(Fidelity International) 등 다수의 대형 투자회사들은 임원 보수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특히 직원들의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¹⁾

1) Financial Times(2021.5.13), "UK Trade Unions Call on Investors to Tackle Boardroom Pay", <https://www.ft.com/> (검색일 : 2021.5.25).

프랑스 : 코로나19 보건위기 여파 속 2021년 1분기 일자리 수치 반등

코로나19로 인해 계속되는 보건위기와 봉쇄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 2021년 5월 7일 발표된 프랑스 통계청(INSEE)의 잠정

추정치에 따르면 1분기에 민간부문 임금노동 일자리는 5만 7,300개(0.3%) 증가했다. 이는 지난 3월의 부정적인 전망(7만 7천 개의 일자리 감소)을 압



도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 고용은 2018년 말 수준에는 도달했지만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보다는 여전히 낮다(2019년 말 대비 -1.3%). 2020년 상반기 1차 봉쇄정책의 영향으로 노동시장 상황은 급격히 악화(-3.2%)된 바 있고, 2차 봉쇄정책은 노동시장에 다시 한번 악영향을 주었지만 그 여파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0.1%). 2021년 1분기에 노동시장의 진정한 척도라고 볼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은 3분기 연속 증가(+0.1%) 후에 안정화되었으나, 이는 2020년 초의 전례 없는 큰 폭의 감소(-40.3%/3개월간 31만 7천 개의 일자리 감소)를 상쇄하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2021년 3월 기준 비정규직 고용은 2019년 말 대비 5.2%(4만 1,200개의 일자리 감소)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 1분기에 민간부문 전체에서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비정규직 제외).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증가세(+0.2%/4,900개의 일자리 증가)가 나타났으나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1.7%/5만 2,800개의 일자리 감소). 음식·숙박업 등과 봉쇄조치의 영향을 받는 상업서비스부문에서도 임금노동 일자리(비정규직 제외)는 완만하게 증가했다(+0.2% 또는 2만 7천 개의 일자리 증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해당 부문에서 약 3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바 있다. 반면 건설부문의 고용은 3개월 만에 1.2% 증가(1만 6,800개의 일자리 증가)하여 위기 이전 2019년 말 대비 3.3%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활동 분야의 서비스부문 고용은 0.3%(7,200개의 일자리 증가) 증가하여 2019년 말보다 1.2%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¹⁾

1) Les Echos(2021.5.7), "Rebond surprise de l'emploi en France malgré les restrictions sanitaires", <https://www.lesechos.fr/> (검색일 : 2021.5.25).

프랑스 : 코로나19로 직업교육 이수한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제한

2021년 5월 20일 노동부에서 발표한 보고서¹⁾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20년 1월 기준, 2019년에 학교를 떠난(졸업장 유무에 관계없이) 수습생의 62%와 직업고등학교 졸업자의 41%가 취업한 상태였으며 2020년 7월에는 수습생의 65%와 직업고등학교 졸업자의 44%가 취업하여,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2020년 상

반기 이들의 고용률은 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해 2020년 상반기에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저해되었음을 보여준다. 2018년에 발표된 이전 자료를 보면 동일기간 수습생과 직업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률은 매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6~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코로나19

로 인해 모든 중등 및 고등직업교육(직업자격취득(CAP), 실업대학 입학자격취득(Bac Pro), 고등기술 자격취득(BTS))과정에서 사회진출 기회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장을 취득하는 것은 사회진출에 유리하다. 졸업자의 고용률(69%)은 모든 교육 수준에서 비졸업자(56%)보다 항상 높게 나

타나고 있다”라면서 보고서의 저자들은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는 또한 성 불평등에도 주목했는데, 2019년 졸업자 중 남성의 고용률(66%)은 여성의 고용률(61%)보다 높아 좀 더 사회진출에 용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성 불평등 격차에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²⁾

- 1) Collin, C., N. Marchal(2021), “Des lycéens professionnels et des apprentis mieux insérés 12 mois après leur sortie d'études que 6 mois après, malgré la crise”, *DARES Focus*, No.24, <https://dares.travail-emploi.gouv.fr/> (검색일 : 2021.5.25).
- 2) Les Echos(2021.5.20), “La crise n'a pas stoppé l'insertion professionnelle des jeunes mais l'a ralentie”, <https://www.lesechos.fr/> (검색일 : 2021.5.25).

일본 : 후생노동성, 우버이츠 배달원의 산재보험 특별가입 검토

2021년 5월 14일 후생노동성은 개인사업주가 스스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산재보험에 특별가입할 수 있는 제도의 대상으로 식음료배달대행업 종사자와 IT 엔지니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¹⁾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산재보험도 고용된 노동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단, 개인사업자라도 사고 위험이 큰 직종은 특별가입 대상이 되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021년 4월부터는 연예계 종사자, 애니메이터, 유도정복사²⁾ 등의 세 직종이 특별가입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우버이츠, 데마에칸³⁾ 등의 배달대행업체 사업주

가 가입한 일본 푸드딜리버리 서비스협회에 의하면, 일본 내 프리랜서 자전거 배달원은 약 9만 명이다. 협회는 자전거 사고의 치사율이 자동차 사고보다 높고 사고에 대한 보상도 사업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인 배달원을 산재보험 특별가입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실제 가입이 늘어날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특별가입 조치의 도입으로 배달원의 안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버이츠 배달원들이 결성한 우버이츠 노동조합의 간부는 “특별가입이 아니라 기업 측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로 산재보험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 1) 朝日新聞(2021.5.14), 「労災保険の“特別加入” ウーバー配達員の加入を検討」, <https://digital.asahi.com/> (검색일 : 2021.5.20).
- 2) 유도정복사(柔道整復師)는 접골원 등에서 물리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 3) 데마에칸(出前館)은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배달대행업체 중 하나이다.

일본 : 4명 중 1명이 취업활동 중 성희롱 피해 경험¹⁾

후생노동성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 또는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활동을 하거나 인턴십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취업활동 중 겪은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5.5%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26.0%, 여성이 25.1%로 남녀 모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의 내용은 “성적인 농담과 놀림”(40.4%)이 가장 많았고, “식사나 데이트 등 끈질긴 권유”(27.5%)

가 다음으로 많았다. “성적인 언행에 거부감을 표해 내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11.0%)나 “성관계 강요”(9.4%) 등의 사례도 있었다.

피해를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인턴십에 참여했을 때”(34.1%)가 가장 많았으며, “기업 설명회나 세미나에 참여했을 때”(27.8%)의 비중도 높았다.

성희롱을 당한 후의 행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24.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학의 커리어센터나 가족, 친구, 지도교수 등에게 상담한 사람은 10~20%에 그쳤다.

- 1) 朝日新聞(2021.5.13), 「“就活セクハラに遭った” 4人に1人 厚労省が初調査」, <https://digital.asahi.com/> (검색일 : 2021.5.20).

중국 : 제7차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 발표

최근 중국 정부는 202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 제7차 인구센서스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국의 총인구 수는 14억 1,178만 명으로 집계돼 2010년 제6차 인구센서스 결과인 13억 3,972만 명에 비해 7,206만 명(5.38%)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¹⁾ 전체 인구 중 0~14세 인구는 2억 5,338만 3,900명으로 17.95%를 차지했고, 15~59세는 8억 9,437만 6천 명으로 63.35%를 차지했으며, 60세 이상 인구는 2억 6,401만 8,800명으로 18.7%를 차지했다. 중국에서는 15~59세의 인

구를 생산가능인구로 규정하는데, 이번 조사 결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0년에 비해 6.79%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0~14세 인구 비중은 1.35%p 증가했고,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5.44%p 증가했다. 그리고 전체 지역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광둥, 베이징, 저장이었고,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허난, 광시, 허베이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폭이 가장 낮은 지역은 텐진, 베이징, 허베이 순이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인 광둥은 그 비중이 2010년보다 4.59%p 감소한 68.8%로 나타났다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5.45%p 높았다. 2010년 조사 당시 광둥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전국에서 일곱 번째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외부 인구가 광둥 지역으로 대량 유입된 것과 관련이 있다. 후강 화난도시연구회 회장 겸 지난대학교 교수는 “최근 광둥 주강삼각주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가속화되고 첨단 제조업과 정보통신경제 등 신흥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취업인구가 대량 유입했고, 주강삼각주 지역이 최근 정착 제한을 완화하면서 많은 사람의 정

착을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광둥성인구발전연구원 동위정(董玉整) 원장은 “광둥 지역의 인구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젊으며 인력자원개발의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주장했다.

저장성의 유동인구는 총 2,555만 7,500명으로 나타났다는데, 그중 성 외부로부터의 유동인구는 1,618만 6,500명, 성 내부의 유동인구는 937만 1천 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저장성에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농촌 노동력과 전국의 IT 분야 인재를 대량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 원인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석됐다. 첫 번째 유형은 베이징과 상하이 사례이다. 두 도시의 외부 유입 인구는 2014년에 정점을 찍은 후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두 도시에서 추진한 인구 통제 및 산업 조정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 유형은 텐진, 허베이, 랴오닝, 지린, 산둥 등의 지역으로, 이 지역 모두 에너지 및 중화학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이 최근 하락 압력에 직면하고 있어서 관련 종사자의 유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²⁾

1) 中国新闻网(2021.5.21), 「从第七次人口普查数据看人口变动的长期趋势及其影响」, <https://www.chinanews.com/> (검색일: 2021.5.23).

2) 中国新闻网(2021.5.14), 「31省份劳动年龄人口占比:广东北京浙江居前三」, <https://www.chinanews.com/> (검색일: 2021.5.23).



브라질 : 연방 대법원, 단체교섭 없는 정리해고의 합법성 여부 다룬다

조만간 정리해고 판결을 둘러싼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최근 브라질에서는 단체교섭 없는 집단해고의 합법성을 두고 지역 노동법원마다 다른 판결을 내려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2017년 노동개혁으로 수정된 통합노동법 제477조 A항에 대한 해석이다. 제477조는 해고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A항에서 개별 및 집단 해고는 그 효력을 위해 노조의 사전 승인이나 단체협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업이 해고를 개시할 때 단체교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인데, 개별 해고와 집단 해고를 동일시할 수 있느냐 점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먼저, 이 둘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집단 해고의 경우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및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최근 공장 철수 및 이전을 이유로 대량해고가 발생했던 포드와 LG전자의 예를 들어 해고 관련 노사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단체교섭이 큰 역할을 했으며, 집단 해고는 개별 해고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둘을 동일시하는 입장에서는 통합노동법의 조항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때, 사용자에게는 단체교섭 의무가 없으며,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법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¹⁾

이 문제가 지방노동법원에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르게 된 경위는 브라질 전역의 바비큐 식당 체인점인 포고 데 샤웅(Fogo de Chão)의 정리해고에서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에 포고 데 샤웅은 경영난을 이유로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브라질리아 지점에서 약 420여 명을 해고했다. 이를 조사하던 리우데자네이루 노동검찰청은 유명 바비큐 식당이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을 대량 해고했다며 2020년 5월 각 지역 노동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리우데자네이루 지방노동법원(TRT-1)의 안나 라리사(Ana Larissa) 판사는 해고된 직원 112명을 복직시키고 10명 이상의 직원에 대한 집단 해고 금지 판결을 내렸으나, 브라질리아주 하급심과 고등노동법원은 대량해고를 합법으로 판결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을 두고 법원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자 전국적으로 노동법 제477조 A항의 해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돼 결국 연방 대법원이 나서게 된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기업에 대해 해고 개시 전 단체교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기업의 반발 등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1) Folha de S.Paulo(2021.5.9), “STF vai definir se empresa pode demitir em massa sem negociação coletiva”, <https://www1.folha.uol.com.br/> (검색일 : 2021.5.12).

브라질 : 연방 대법원, 2022년부터 극빈층 대상 기본소득 지급 명령

4월 26일 연방 대법원은 정부에 대해 브라질 극빈층을 지원하기 위한 최저 기본소득을 설정하고 2022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기본소득은 의식주와 교육 및 건강을 위해 필요한 최소 지출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월 소득이 89~178 헤알(약 1만 9천~3만 8천 원)인 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선 변호인협회(Defensoria Pública : DPU)는 2004년 기본소득법이 제정된 후로 17년 동안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극빈층을 위해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소송을 낸 바 있다.¹⁾ 브라질은 2014년까지 불사 파밀리

아(Bolsa Família)²⁾ 같은 사회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빈곤율이 감소해 왔으나, 최근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극빈층이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 4월 브라질의 대표적 민간 연구기관인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undação Getulio Vargas : FGV)은 브라질의 빈곤층 인구가 2020년 8월 950만 명에서 2021년 2월에는 2,700만 명으로 불과 1년도 안 돼 약 3배나 증가해 브라질 인구의 12.8%를 차지하며, 이들 중 많은 가족이 한 달에 246헤알(약 5만 1천 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³⁾

1) G1(2021.4.26), "STF manda governo fixar valor para renda básica e pagar benefício a partir de 2022", <https://g1.globo.com/> (검색일 : 2021.5.12).

2) 불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는 1인당 소득이 월 89헤알(약 2만 원) 미만인 극빈층이나 임산부, 아동 또는 청소년을 둔 빈곤 가족(1인당 소득 월 2만~3만 7천 원)을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현재 1,390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3) G1(2021.4.5), "Número de brasileiros que vivem na pobreza quase triplicou em seis meses, diz FGV", <https://g1.globo.com/> (검색일 : 2021.5.12).